【 2017.1.23(월) 강원일보 】

200만원 상당 상품권 기탁 강릉 삼우종합건설(대표:최동순)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교1동주민센터를 방문,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2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기탁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원 쾌척

요진건설산업

【원주】요진건설산업(주)(대표:최은상·사진)이 설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쾌척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 도급순위 1위에 올라 있는 요진건설산업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지역 불우이웃에 써 달라며 원주시에 5,000만원, 강원도에 5,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지정 기탁해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시에 지정 기탁된 후원금은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원주시 내 불우 이웃에게 전달된다. 유학렬기자

【 2017.1.23(월) 강원도민일보 】

도내 공공공사 건설수주 2010년 이후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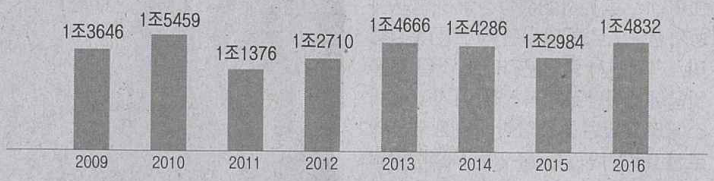
작년 1조4832억…전년보다 14%↑

부동산 활황·군시설 공사 영향

지난해 강원도내 공공공사 수주 실적이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가 최근 잠정 집계한 지난해 도내 공공공사 수주 실적은 1조4832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수주액 1조2984억원보다 14% 증가한 수치로 2010년(1조5459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 사실상 동계올림픽 특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지난해 공사 수주 증가는 이례적인 평가다. 연도별 공사 수주액은 2009년 1조3646억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가 본격 시행된 2010년 1조545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2011년 1조1376억원, 2012년 1조2710억원, 2013년 1조4666억원, 2014년 1조4286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도내 공공공사 수주현황 단위/억원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주 증가는 동계올림픽 영향보다는 도내 부동산 활황세에 따른 건설경기와 군시설 관련 공사가 수주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은 군아파트 신축 등 총 743건에 1조522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으며 신규 사업만 4012억원 규모였다. 올초에도 국방부는 1446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중도내 사업장은 △양구·인제 병영시설(810억8000만원) △철원·연천 병영시설(316억9000만원) △원주·홍천 병영시설(318억6000만원)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동계특수 완료에도 불구하고 군시설과 부동산 경기 활황세 등으로 지난해 공사 수주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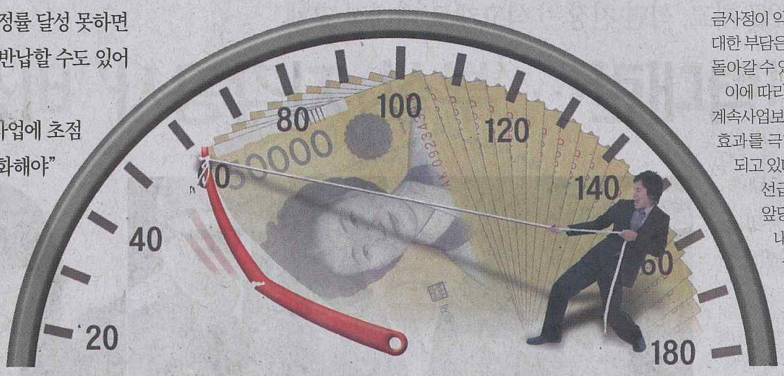
안은복 rio@kado.net

SOC 공공기관, 재정 조기집행 분주… 집행부진사업 감소 기대되지만

무리한 선급금 지급·공정 앞당기기 부작용 우려도

선급금만큼 일정 공정률 달성 못하면
건설사가 이자 붙여 반납할 수도 있어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에 초점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해야"



재정 집행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국토교통부와 SOC 분야 공공기관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전체 SOC 예산 중 1분기에 31.7%(5조8000억원), 상반기에 60.5%(11조원)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정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1분기 28.8%, 상반기 56.8%로 올해 전체 사업예산 25조7000억원 중 1분기에 7조4000억원, 상반기까지 14조6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들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행률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실제 집행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진 사업이 크게 줄어들고 실집행률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재정을 늘리는 것보단 집행률 목표 채우기에 급급할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와 SOC 공공기관들은 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선급금 지급률과 공정률 상향조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들은 기존 50%인 선급금 지급률을 70%로 올리고 공정률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공정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공정률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선급금의 경우 지급된 선급금만큼 일정 수준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일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받고 부도처리되거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원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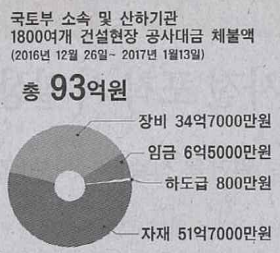
선급금 지급 확대와 무리한 공정 앞당기기에 따른 조기집행보다는 내부 계약절차와 심의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서둘러 발주해 재정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주택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조기 발주해 현장이 돌아가도록 하면 재정 조기집행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상습체불' 하도급업체 퇴출

설 앞둔 건설현장 체불액 93억 중 83억이 하도급서 발생
체불이력 하도급업체 공사참여 못하게 건산법 개정 추진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 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모든 소속 및 산하 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이 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당시 체불액 222억8000만원보다 58% 이상 줄어든 것이다.

분야별 체불액은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주기관을 상대로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체불대금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특히 체불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의 70%인 60억7000만원, 체불임금의 98%인 6억4000만원이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관리·부도 등으로 설 이전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방지책도 마련했다. 그동안 원청사에 집중됐던 체불 대책을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실제 건설현장 체불액의 90% 이상이 하도급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설에도 전체 체불액 93억원 가운데 하도급업체 체불 대금이 83억700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습 체불 하도급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 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점검해 체불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애써왔다.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 시스템'을 현재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앞서 시스템(체불e제로)을 도입한 철도시설공단은 176개 현장에서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불업체가 보증서를 발급할 때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 체불업체는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상습 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원을 자진 해결하기도 했다.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선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